

◆ 혁신의 비전, 목표 및 과제

혁신의 비전
신뢰를 바탕으로 선택받는 민주당



혁신의 목표
유능한 대전시당, 강한 민주당



{ 4대 중점 과제 }

I. 민주 정당
당내 민주주의 실현

II. 민생 정당
민생 살리기 정책 개발과 추진

III. 소통 정당
소통 확대와 시민 신뢰의 공고화

IV. 정책 정당
정책개발 능력 강화

◇ 중점 과제별 세부 추진 과제

I. 민주 정당

1. 기초·광역의회 의원 후보 공천 개혁
2. 대의원 제도 개혁
3. 평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4. 투명한 시당 운영

II. 민생 정당

5. 민생대책기구 설치
6. 범진보세력과의 소통 강화
7. 민생 및 정책 시민제안 시스템 구축

III. 소통 정당

8. 당원 참여플랫폼 확대
9. 대시민 홍보 강화
10. 당원 자치지원사업
11. 청년 조직의 활성화

IV. 정책 정당

12. 정책전담기구 설치
13. 의정활동 지원 프로그램 신설
14. 정치아카데미 설치 및 상설화

1. 민주 정당 1. 기초·광역의회 의원 후보 공천개혁

제안 배경

-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원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시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가 공천을 받고 있음
- 지역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제기됨
- 함량미달, 또는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후보는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등의 폐해가 반복되어 왔음
- 따라서 시·구의원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 행정능력, 당 정체성 부합 여부 등을 당원의 눈높이에서 함께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 내용

① 시·구의원 3선 초과 원칙적 금지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의원과 구의원의 3선 초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감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공천과정에 당원 참여

- 시·구의원 공천과정에서 출마자의 정책·정견발표 등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후보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공천 시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경쟁을 통해 선출한다.

③ 엄격한 공천관리

- 공천심사 과정에서 감가산점제도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 해당행위 등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선출직 공직 및 당직을 맡지 못하게 하여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
- 공천관리위원회에 적극적 정당 활동가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검증의 신빙성을 높인다.
- 공천심사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한다.

1. 민주 정당 2. 대의원 제도 개혁(중앙당 건의)

제안 배경

- 대의원 대회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권리당원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됨
- 당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의 과도한 득표 비중과 권리당원과의 표 등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시도당 및 지역 대의원 선출 시 각 위원장들이 직접 개입하여 지역위원회의 장악을 시도하는 등의 폐해 발생하고 있음

주요 내용

① 대의원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대의원제도 개선 방안

· 선출방식 변경

권리당원 중 신청자를 선정해서 권리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전체 대의원 중 일부는 자치구별로 공개 추첨하여 선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대의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총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 대의원의 자격 및 책임 강화

대의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중대범죄자 및 해당(害黨) 행위자의 대의원 임명을 금지하고 자치당규에 평당원의 발의를 통한 대의원 소환투표제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 선거에서의 투표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표 투표 비중 편차를 현재 6배 정도에서 2배 정도로 조정한다. 또한 자치당규에 대의원의 지방선거 및 당직후보자에 대한 경선결정권이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한다.

②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 대의원 권한을 권리당원에게 이양하는 방안으로 대의원 권한을 권리당원의 총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 자치당규에 권리당원 총투표를 통한 결정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당헌 제19조에 규정된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확대·개편하여 전국대의원대회의 역할을 맡게 한다.

1. 민주 정당 3. 평당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안 배경

- 대전시당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평당원의 관심과 참여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
- 대전시당 운영에 대한 평당원들의 견제와 비판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이 요구됨

주요 내용

- ① 대전시당위원장으로 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평당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시당의 운영과 사업에 평당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당원 주권을 구현하고, 평당원이 당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② 회원은 권리당원이 되며, 선출직 공직자, 상근직 당직자,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은 제외한다.
- ③ 공개적 회원모집을 통해 자격을 갖춘 당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평당원협의회는 시당위원장, 시당의 운영조직, 집행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며, 평당원의 자발성에 기초해 조직하고 운영한다.
- ④ 평당원협의회 대표 및 임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입후보자 중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한다.
- ⑤ 협의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 ⑥ 협의회는 시당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당원 자치행사 등을 개최한다.
- ⑦ 시당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협의회에 예산, 공간, 홍보 등을 지원한다.
- ⑧ 시당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1. 민주 정당 4. 투명한 시당 운영

제안 배경

- 당원이 정당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시당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당원과 시민들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음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당의 사업 및 예산 관련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① 시당 회의 개방

- 시당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에 대한 당원의 참관을 폭넓게 허용한다.
- 참관을 원하는 당원은 당원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한다.

② 시당의 각종 회의의 회의록 공개

-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는 회의 후 1주일 이내에 대전시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회의록을 공개한다.
- 공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시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처리 후 그 사유를 밝힌다.

③ 사업(안) 및 사업 시행 결과 보고서 공개

- 연도별 사업계획(안) 공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원 및 시민의 참여를 독려한다.
- 사업 별 집행 내역 및 결과를 공지한다. 공지 대상 사업 및 공개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정보공개 등 관련 당규 제정

- 비공개자료에 대하여 일정수의당원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당은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
- 정보공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당 당규를 보완한다.

II. 민생 정당

5. 민생대책기구 설치

제안 배경

-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속에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음. 민생경제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정부여당은 무감각·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위기 극복의 전망이 보이지 않음
- 대전지역의 경우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수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지역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 내용

- ① 시당위원장 직속 TF형태로 대책기구를 설치한다.
- ② 민생대책기구의 장을 국회의원 또는 구청장급으로 하여 기구의 위상과 실행력을 높인다.
- ③ 민생과 관련이 있는 상설위원회인 노동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의 장들이 실질적으로 민생대책기구에 결합하게 한다.
- ④ 책임감 있고 실행력 있는 시·구의회 의원이 결합하여 시정과 구정에 민생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민생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단체, 농민단체, 노동단체, 비정규직단체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대책기구의 활동에 반영한다.

II. 민생 정당

6. 범진보세력과의 소통 강화

제안 배경

- 현재, 시당과 시민사회 및 범진보세력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민사회 및 범진보세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면 개혁과제의 실행 및 지역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대세력을 확대하여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협치의 기반을 확장해야 함
- 소통을 통해 미래사회 의제(어젠다)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함
- 소통을 통한 상호신뢰의 구축이 협치의 기반임

주요 내용

- ①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상적, 정례적으로 시민사회 및 범진보세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 ②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권력 감시, 노동, 환경, 복지, 여성, 인권,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분담하여 지역 현안 및 개혁 과제 중심의 정책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 ③ 공동의 정책 의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II. 민생 정당 7. 민생 및 정책 시민제안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 민주당은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은 단절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음
- 시민들이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음

주요 내용

① 정책버스킹 실시

-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과 자유로운 정책 토론을 실시한다.
- 정책버스킹의 결과를 시당 운영에는 물론 시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 정책버스킹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홍보하여 당원과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② 상설 주민자치모임 운영

- 정책아카데미 수료자를 중심으로 정치·취미·지지 모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 없이 자치모임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 동단위 당원협의회와 연동하여 운영하는 한편 정치신인을 발굴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당의 기초 조직으로 활용한다.

③ 시민청원, 정책제안 공간 운영

- 시당 홈페이지에 게시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 혹은 민생과 관련한 시민들의 청원과 정책제안을 상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접수된 청원과 제안은 해당 시·구·의원에 전달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접수된 청원과 제안의 처리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안자에게 피드백 한다.
- 기초 및 광역의회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제안 사항은 시당을 거쳐 중앙당에 협조를 요청한다.

III. 소통 정당 8. 당원 참여플랫폼 확대

제안 배경

- 중앙당은 물론 대전시당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당의 정보에 접근하는 페이지 뷰가 권리당원의 수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 홈페이지에 당원과 시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이것이 소통 부족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당원들이 시당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유기적 소통이 부족함
- 전직 사구의원들에 대한 시당의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그 결과 자발적 조직과 활동이 미흡함

주요 내용

① 당원 게시판 운영

- 대전시당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창구에 당원의 목소리를 듣는 게시판을 마련한다.

② 소통 공간 마련

- 대전시민 또는 당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을 당사 건물이나 별도의 위치에 마련한다.
- 일정 요건을 갖춘 당원과 시민에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전직 사구의회 의원 모임 활성화

- 전직 사구의회 의원과 함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과 교육 등을 개최한다.

III. 소통 정당 9. 대시민 홍보 강화

제안 배경

- 시당의 활동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그 주된 원인은 시당의 홍보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홍보시스템은 파편화되어 있고 전문적인 홍보인력이 부재하여 효능성과 지속적인 홍보가 어려웠음
-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시스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
- 홍보물의 온라인 채널 또한 매우 단절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부족함

주요 내용

① 대변인실 신설

- 시·구의원 및 청년, 홍보소통위원장을 망라하는 대변인실을 구성하고 실무총괄을 상근대변인이 맡도록 한다.
- 보도자료, SNS컨텐츠, 동영상 등을 통한 홍보를 기획하고 집행한다.
- 정기적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② SNS강화 및 지속을 위한 아웃소싱 실현

-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위해 아웃소싱을 실시한다.
- 대변인실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관리하도록 하여 생산된 대응 방안을 즉시 각종 콘텐츠로 만들어 유통할 수 있도록 젊고 기민한 업체에 아웃소싱한다.

③ 홍보유통시스템 재정비

-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홍보에 대한 비중 등을 재정비하여 효과적 홍보를 추진한다.
- 홍보소통위원회 및 사무국장단을 중심으로 SNS망을 재정비하여 빠르고 넓게 확산되도록 한다.
- 당원 중심의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 깊숙이 들어가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한다.

III. 소통 정당 10. 당원 자치지원사업

제안 배경

- 당원의 시당 활동 참여 활성화 필요함
- 당원이 당원생활을 통해 재미를 느끼는 정당 문화의 조성이 요구됨
-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의 당내 구현이 필요함
- 당원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모임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당원이 재미있는 민주당, 당원의 참여가 활성화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음

주요 내용

① 당원의 자발적 조직 모임에 대한 지원

- 당원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취미, 학습, 놀이, 문화, 스포츠 등의 모임에 대해 적절한 예산을 세워 지원한다.

② 당원이 제안한 당원 행사에 대한 지원

- 당원이 제안하는 당원 행사를 적절한 예산을 세워 지원한다. 어린이날 갑천맹꽁이축제, 당원가계탐방, 가족심쿵캠핑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 당원참여예산제에 포함하여 추진을 검토한다.

③ 당원참여예산제를 실시

- 당원이 공모를 통해 제안한 사업을 당원참여예산 심사기구에서 예산의 150%까지 선정하고, 최종선정은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

III. 소통 정당 11. 청년 조직의 활성화

제안 배경

- 신분, 나이, 지역의 장벽을 넘은 청년정당 건설을 목표로 다수의 청년이 직접 참여가 가능한 개방적 MZ조직으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직이거나 선거 때만 등장하는 한시조직이 아닌 확실한 지원과 끈끈한 조직력으로 대전시당의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 및 차기 권력 창출 등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역할 강화가 필요함

주요 내용

① 신분·나이·지역을 넘나드는 청년조직

- 대학생위원회를 대학의 장벽을 넘어 MZ세대 부문조직으로 확대한다.

정규대학 재학생에 한정된 대학생위원회 제도의 폐쇄적 입회규정을 개정하여, 예비대학생·대학 밖 청년·취업준비 졸업자 등 만 18세 이상 20대 청년 전체에 대전시당 대학위원회의 입회자격을 개방한다.

- 청소년-20대-청장년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청년 조직 주체간 연계성 강화

청년세대의 성장 및 유기 협력을 위한 기존 부위원장단 정원 외의 명예자문직으로 청년상설조직에 세대융합 특별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상·하위 세대그룹간 정책 및 당무소통성을 강화한다.

- 청년/대학위원장의 타 시도당 활동 청년당원 네트워크화 책무 규정

지역 거주 활동가의 물리적 활동에만 국한된 활동체계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 가진 청년당원 전체가 개방적 활동 가능하도록 토대를 만든다.

② 당의 새싹들이 미래의 강인한 조직으로 되기

- 청년조직에 적합한 정책협의체 설립 및 지원근거 신설

대전시당 청년분야 상설조직을 중심으로 산하에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하여 세대특성에 맞는 역동적 조직으로 승화 추진한다. (대학캠퍼스지부·학생자치협의체·산별조직 등 구성)

· **청년조직의 타 상설위원회와 교류협력사업 장려**

대전시당 산하 여성·노인·장애인·노동·농어민·을민생·사회적경제 등 부문별 전국위원장급 상설위원회에 청년의 정책 시각을 전달하는 청년보좌직을 청년분야 조직장 간 협의를 통해 파견 가능하도록 한다.

· **지방의정과의 협력으로 풀뿌리 정책인재 발굴**

당 차원에서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에 지방의정을 학습하는 지방의원단 대학생 정책지원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참가자에게는 증명서 발급과 당직 및 보좌직 통합 리크루팅을 추진한다.

· **청년당원 결속과 유대 강화**

유명무실한 당원자치회 제도를 활용하여 청년사회와 당을 기반으로부터 결속화한다. 정기적으로 예능, 체육, 취미 활동 분야를 매개로 청년 당원자치회를 모집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V. 정책 정당 12. 정책전담기구 설치

제안 배경

- 대전시당 자체의 중장기 비전의 부재로 시정과 구정에 있어서 연속성이 결여됨
- 또한 선거 때마다 제시되는 후보자의 공약이 민주당의 지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급조되는 경향이 있음
- 정책을 담당하는 주체가 정책실장 한명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수립이 불가능한 실정임
- 민주당이 추구하는 대전의 미래상을 확립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

주요 내용

① 상설 정책위원회 설치

- 정책 방향 수립과 정책 의제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 실무총괄은 상근정책실장이 담당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정책능력을 갖춘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위촉한다.
- 각급 선거의 정책 의제 및 공약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지역의 현안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 내에 과학기술정책특별위원회 등 지역 특성 상 설치가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두어 심층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 대변인실과의 유기적 결합으로 정책의 홍보의 효율성을 높인다.

② 대전미래비전위원회 운영

- 대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 목표, 전략 등을 마련하는 싱크탱크를 구성한다.
- 일정기간 활동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 내·외부 인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대전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전략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연구한다.

③ 정기적 여론조사 실시

- 정기적으로 시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 동향을 체계적·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과 시당 운영에 적극 활용한다.

IV. 정책 정당 13. 의정활동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제안 배경

- 현재 시당에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당 소속 시의회 및 구의회 의원들은 의회 내부의 지원 인력과 의원 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그 결과 시·구의회 의원의 지역 현안 대응 및 정책의제 선도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주요 내용

① TF 활동 지원

당 소속 시·구의회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TF 활동을 지원한다.

② 연구동아리 지원

당 소속 시·구의회 의원들이 연구동아리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선·후배 의원 간의 교류 활동 지원

시·구의원들이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후배 의원 간의 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④ 타 지역 의원과의 교류·협력 지원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 의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 지역 지방의원과의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 현안의 전국 의제화를 위해서도 타 지역 의원과의 교류·협력은 확대되어야 한다.

⑤ 국제교류 활동 지원

지방의회의 외교 역량을 구축하고 UCLG 등 국제협력 플랫폼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IV. 정책 정당 14. 정치 아카데미 설치 및 활성화

제안 배경

- 당의 운영이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어 청년, 여성 등의 정치 신인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 당의 미래를 이끌 젊고 실력이 있는 준비된 정치인이 부족하여, 이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요구됨
- 당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 당원 간 유대 강화 및 전·현직 정치인의 네트워크 활성화, 진성당원의 확보가 절실함
- 대전시당의 모범적이고 체계화된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전국으로 보급 확산이 필요함

주요 내용

① 청년 정치학교

- 젊고 실력 있는 정책전문가 육성을 위해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 주거, 노동일자리, 생활복지, 교육, 환경생태, 성평등, 갈등해소, 기후변화 등의 주제를 다룰 수 있다.
- 청년들의 협업 및 창의성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경진대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대전을 세계화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 해외 청년의 정치 참여 및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정당 및 의회 등 정치현장에 대한 인턴십 프로그램, 현장견학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한다.
-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되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증명서 발급을 통해 당직 및 보좌직 채용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자 자부담 교육으로 하되, 청년 참가자는 소정의 참가비를 낼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이수자에게는 기수를 부여하여 소속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여성 정치학교

- 여성의 정치 대표성 및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글로벌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 해외의 여성 정치 참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③ 당원 정치학교

- 당원 정치학교는 신규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 기초 교육과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당원 교육을 수행하며 연 1회 이상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당헌·당규 및 민주당의 역사 교육, 당의 정책 방향 및 운영 등을 교육한다.
- 신규당원은 당원정치학교에서 소정의 강의를 필수적으로 수강한다. 미수강자에게는 공천배제, 대의원 불가 등의 불이익을 주고 우수교육 수료자에게는 강사 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출마자 정치학교

- 출마를 위한 기본교육인 정치인의 자기관리, 언어교육, 인성교육(기초교육), 정치철학, 민주당의 이념, 철학, 역사, 미래 등에 대해 교육한다.
- 실전 교육으로 입법, 정책 설계, 스피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 실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당의 위원회 등을 맡을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인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도록 한다.

⑤ 청소년 정치학교

- 리더십 함양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참여도를 높인다.
- 일반인 및 당원 청소년 학부모를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 우수 참가자에게는 수료증 발급을 통해 성취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정당 및 의회 현장견학 등을 통해 실무경험을 높인다.